

제429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5년11월10일(월)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보건복지부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질병관리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보건복지부 소관
 - 질병관리청 소관

상정된 안건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2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3
 - 보건복지부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질병관리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 보건복지부 소관
 - 질병관리청 소관

(09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주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일 우선해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과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 등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예산안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전체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중 이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스란 차관님께서서는 적절한 시간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일찍 가지 마시고요.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09시08분)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누구 1명 이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09시10분)

○위원장 박주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조남제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채택되고 채택됐다는 것을 안 후에 국외로 출국하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발하기로 한 증인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인 것 아시지요? 제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3.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09시11분)

○위원장 박주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은경 장관님께서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는 총 137조 6480억 원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의 18.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26년 예산안은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하고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 시행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고 노인일자리와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입니다.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심뇌혈관 질환, 응급의료 및 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AI 기반 복지·돌봄 및 의료 AI 경쟁력을 확보하고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관심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김혜진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정 규모입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9.7% 증가된 규모이며 추경 대비 9.9%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중점 투자 사업입니다.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여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195만 1000원에서 207만 8000원으로 확대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부양비를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을 지역가입자 중 납부 재개자에서 기준소득 월액 80만 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제공 확대입니다.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가 취약한 183개 지자체에 특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건소를 기반으로 한 노쇠예방관리서비스도 신규 도입합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신설하여 1만 명에게 추가 제공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를 2000명, 긴급돌봄서비스를 1000명에게 추가 제공합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을 고독사 고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푸드마켓 130개소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신설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가 별도의 조건 없이 기본적 식료품과 생필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및 기본적 권리 보장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7000명 확대하고 가산급여도 최대 53시간 확대합니다.

장애인일자리를 2300개 추가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과 공공신탁 재산관리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미 전문수당을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신설하고 가족 휴식 프로그램을 4000명 확대하는 등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8쪽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과 아동·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15만 8000명 확대하고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지역

을 6개소 확대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와 분유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장애인 가구로 완화하여 3만 5000명 추가 지원합니다.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하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최대 3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합니다.

9쪽입니다.

어르신 지원 강화 및 초고령사회 대응입니다.

노인일자리는 115만 2000개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전전담인력을 신규 배치합니다.

기초연금을 6850원 인상하여 월 34만 9360원 지급하고 수급 대상을 43만 명 확대합니다.

치매환자의 재산을 공공신탁하여 보호하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10쪽입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입니다.

암·심뇌혈관질환·응급 등 필수의료 확충합니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과 심뇌혈관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심뇌혈관센터의 운영비와 성과보조금을 확대합니다.

지역모자보건센터 15개소의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원 전담팀 운영을 지원합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응급의료기관 용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비비를 지원합니다.

고난도 외상 치료가 가능하도록 중증외상거점센터 2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시설 장비비도 확대 지원합니다.

11쪽입니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입니다.

지방의료원에 지역거점병원 기능 특화와 필수의료 운영을 지속 지원합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AI 진료모델 도입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취약지에서 더 많은 의료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을 50명 늘리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역을 2개 시도 확대합니다.

12쪽입니다.

국민건강 안전망 강화입니다.

체계적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에 대한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합니다.

진료지원간호사에게도 신규로 책임보험료를 지원하고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 도입을 신규 지원합니다.

자살예방 체계 등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시 전 연령층에서 소득기준을 면제합니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전국에 약 2배 확충하고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시행합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중독자 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신질환자 가족 모임과 동료 지원을 신설하고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확대합니다.
13쪽입니다.

AI 기반 보건복지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입니다.

복지·돌봄 현장에서 다양한 AI 활용 시범사업을 통하여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합니다.

복지·보건 응용 제품에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는 AX-Sprint 사업에는 총 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14쪽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최초로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K-바이오 백신펀드와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 출자금 800억 원을 지원하며 화장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개발, 인프라 투자도 강화합니다.

바이오산업의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규제 대응, 현지 거점 구축 등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계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주교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오셔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노고를 이어 가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식약처 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8.4% 증가한 81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식품 위해요소 사전 예측 등 기후변화 대응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회귀·필수의약품 주문생산 확대 등으로 환자 치료 기회를 넓히고 허가·심사 시스템 혁신과 신속 제품화로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도 지원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준비된 자료로 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과 7쪽 26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생략하고 12쪽 세입세출예산안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6년 세입예산안은 25년 대비 8.3% 증가한 464억 원 수준입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5년 대비 8.4% 증액된 8122억원입니다.

사업비는 10.2% 증액된 6212억 원, 기본경비는 2.3% 증액된 215억 원이며, 인건비는 1694억 원으로 전년보다 3.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6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해관리 선진화에 25년 대비 0.1% 증액한 2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위생용품으로 신규 지정된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무균 시험실 구축 등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 안전성 제고에 25년 대비 17% 증액한 8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영세업체 대상 스마트 HACCP 구축비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에는 25년 대비 11.9% 감액된 7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기후와 환경변화로 인한 신종 위해요소 사전 예측과 선제대응을 위한 예산 등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는 25년 대비 0.2% 감액한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수거 검사 예산 등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성 제고는 25년 대비 1% 감액한 3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자가 치료형 의약품의 긴급도입 전환 등 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는 25년 대비 8.9% 증액한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내년 개원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국내 도입 기반 마련 등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마약류 안전성 제고는 25년 대비 13.7% 증액한 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지시스템, 대국민 안전정보 제공 및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 확대를 위한 예산 등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의료기기의 안전성 제고는 25년 대비 10% 증액한 2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사업에서는 정보시스템 망분리·이중화 등 보안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는 25년 대비 5.5% 증액한 1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프로그램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등 4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식의약품 행정지원에는 25년 대비 49.8% 증액한 11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 정보화 사업인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사업에서 의약품 진흥형 허가심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지원 강화 사업에서는 기술발전 속도에 상응하는 허가심사 기준 마련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안전평가원 관리운영 사업에서는 신종 마약류 표준물질 합성 및 임시 마약류 의존성 평가 수행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이후 기본경비 및 참고자료는 배포한 자료로 같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님 나오셔서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존경하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제출한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1조 33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상시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령기 청소년 독감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을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접종 대상을 여성에서 12세 남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호흡기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와 같은 보완적 감시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 예산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위해 대비·대응을 위한 재정투입을 지속하겠습니다.

희귀질환 의심환자가 조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희귀질환 환자분들의 진료 접근성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기관도 확충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넷째, 보건의료 연구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미래 팬데믹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을 지속하고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연구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미래 보건의료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개요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2026년 재정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출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2661억 원 대비 5.1% 증가한 1조 3312억 원입니다. 총수입 규모는 금년도 668억 원 대비 52.1% 감소한 322억 원입니다.

이어 2쪽부터 32쪽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4487억 원 대비 6.4% 증가한 477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 연구 기반 조성 사업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12억 원 및 질병 대응 연구 및 기반 조성 3억 원 등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은 개인보호구 및 의료장비 보관을 위한 중앙방역 비축물품 38억 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된 신종감염병 의료 대응체계 운영전략 마련을 위한 감염병 병상체계 정책연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비 137억 원,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감리비 및 설계비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사업은 감염병원인병원체진단지원, 신·변종 감염병 실험실 체계 구축 등 지속 운영을 위해 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손상예방관리 사업은 손상을 포함한 각종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대응 및 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인 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가심뇌혈관센터 구축 사업은 실시설계비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 사업은 감염병백신피atform고도화연구를 위해 86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바이러스 감염병 진단·치료·면역 핵심기술 다각화 등을 위한 국가바이러스감염병 극복기술개발에 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Ⅱ는 인체자원 저장시설 증축 및 임시저장시설 운영을 위해 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소외질환 극복연구 사업은 소아청소년 비만, 당뇨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예방진단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3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7737억 원 대비 4.0% 증가한 8050억 원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은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감염병관리지원에 66억 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에 14억 원 등 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 사업은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15억 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 11억 원 등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12세 남아 HPV 예방접종 확대에 93억 원,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46억 원 등을 반영하여 63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지속운영 및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해 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응급의료기금은 금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3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 검토보고 7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내년도에 지급 대상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 1만 원 또는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수도권 거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도 복지정책적인 측면에서 추가 지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정 비율 준수 및 보험료율 인상 반영을 위한 증액 필요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안은 12%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험료율을 전년 대비 1.48% 인상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현재 편성된 예산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약 11.9%에 불과합니다. 법정 지원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1조 945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 외에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에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할 때 각각 162억 9000만 원과 363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문신사범 시행 준비를 위한 예산 반영 필요입니다.

문신사범이 2027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문신사범의 시행 준비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신사범의 시행 준비를 위하여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준비, 문신사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체계 구축,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식약처 소관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관련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필요입니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조성의 내년도 예산안은 27억 91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과반이 넘는 14억 6000만 원이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 컨설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추진 계획에 따르면 컨설팅 대상이 되는 연 생산실적 10억 원 미만 업체는 2031년에서야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업계가 수출 및 안전성 평가제도 대응을 위해 원료 표준화와 정보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컨설팅보다는 화장품 원료 표준화 등 기반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청 소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

법 시행에 따른 피해보상금 예산안 증액 필요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발생한 피해 간의 인과관계 추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 2025년 10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피해보상금도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보상금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주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질의시간은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시간 포함하여 5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존과 달리 추가질의 기회가 아마 없으실 수도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1분을 추가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가 됐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한지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아 위원 장관님, AI 시대를 위해 복지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보건 분야는 디지털 의료기기 상용화나 현장 도입이고요. 보건복지 분야는 돌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한지아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아 위원 지금 정부는 AI 강조하지만 설계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보여 주기식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를 향해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AI 데이터센터 구축, 안정적 전력공급, 학습용 데이터 확보 이런 것들과 같이 기초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GPU 같은 연산자원 확보, HBM 같은 초고속메모리 확보, AI를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보 그리고 학습용 보건복지 데이터 확보,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루가 늦어지면 AI 관련된 산업 자체가 활성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PT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AI 관련 예산 총 2478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말씀하신 신규사업, 아마 그런 일환일 것 같은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자원 2건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걸 자세히 보면 기획도 잘 됐는지 모르겠고 시급성이 있는지, 절차 미비, 구체성 결여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지금 복지부는 500억 규모의 편성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사유로 예타 면제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과거 우리가 정말 긴급하다고 생각했던 코로나 백신 이런 것들은 예타 면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500억짜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예타 면제가 꼭 필요한지, AI 인프라 확충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아까 GPU 확보, HBM 확보, 보건복지 분야의 학습용 데이터 확보 이런 건 중요한데 여기서 이 500억 안에 있는 사업설명서에 기술된 예시를 보

면 AI 수면 모니터링, 침대매트 기술 상용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중요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시급하냐에 있어서는 예타 면제까지 갈 필요가 있냐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정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AI 자만 붙이면 모두 다 긴급하다,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미비한 통합돌봄도 AI를 붙여서 예타 면제받고 예산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할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급성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이 훨씬 더 많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타 면제 사유로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게 예타 면제라도 예타 조사 방식에 준해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KDI가 9월부터 시행 중에 있고요. 연말 안에 종료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니까 법적 검토 후 반영을 원칙으로 봤을 때는 완료가 안 됐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한 내부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예타 면제됐지만 9개월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국감에서 굉장히 질타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거 예타 500억짜리 예산 아닙니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업 설명들을 보면, 보건 분야부터 보겠습니다.

산출 근거, 예산안 산출 근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담기관 사업운영경비 항목만 덩그러니 있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이거 200억 사업이거든요. 그 세부 내용 보면 추진 목적도 없고 지원 범위도 없고 중복 사업에 대한 언급도 없고 기술개발 실증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따른 지원계획도 불명확하고 어떤 AI 응용기술 분야를 우선순위 할 건지에 대한 논리도 없습니다. 복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법령 보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민간 기업 제품개발 상용화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AI를 강조하지만 그 시급성에 있어서는 A 자만 붙이면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복지부에 500억 편성됐으니까 이거를 그냥 사업을 만들자 하는 그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건 분야 할 거 많지 않습니까, 장관님? 우리가 필수의료 공백에 시달리고 있는데, 보건소 7곳 중 1곳은 의사, 간호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PPT 봐 주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위기가구 이런 500억으로는 5만 가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만 가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의료 강화한다고 했는데 복지부·질병청 산하 병원 6곳, 의료장비 노후화율 40%인데 500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AI 단어 좋지요. AI 인프라 시급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 AI의 모든 분야를 우리가 긴급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타 면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장관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I

공약 실적용 사업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설계하지 않을 거면 전 액 삭감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돌리세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저는 내년 국감 때 정말 자세히 질의하고 비판할 겁니다. 이게 그냥 보여 주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활용한 수면시간, 매트리스 이런 부분들 중요할 수 있는데 시급하지 않거든요.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내용 다시 다 검토하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AI 사용해야 한다면 AI 인프라 중 보건복지부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이런 것에 좀 더 투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사어 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인 사업 갖고 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박주민 예,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한지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성과가 날 수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기초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인 하드웨어 부분은 아마 과기부랑 할 것 같고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 사업으로 데이터 확보에 대한 것들 또 관련 법에 대한 부분들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 드리는 어떤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부터 TF를 만들어서 기업이나 지자체의 수요조사랑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기획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우려사항 깊이 이해하고요. 성과가 날 수 있게끔 사업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예타 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긴급성이 없습니다, 그 사업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AI라고 해서 다 긴급하게 예타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고…… 왜냐하면 예타 면제해서 빨리 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 부실해집니다. 한국형 ARPA-H 결국에는 부실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합니다. 그러면 500억 예산을 들이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선순위 봐야 되고요. 예타 면제를 받지 않고 그런 적정성 검토를 받는 이유는 이게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생략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KDI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검토하고 또 최종 예산 확정될 때 그런 부분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원입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희 의원실로 접수된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보도에 나온 산모께서는 지난 5월에 산 후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 때문에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남편께서 간호는 물론 육아, 막

대한 병원비까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인데요. 폐색전증은 수술이나 퇴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 소송을 해도 무과실로 처리돼서 사실상 어디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3년부터 출산 중에 불가항력적 분만사고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산모의 경우에 보상 기준이 의료진의 무과실을 전제로 사망하는 경우에만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 여건이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물론 복지부가 지난 7월에 현장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확대 요구에 따라서 보상 한도를 상향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가항력적 분만사고로 인한 장애 산모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사업이 보상 수요가 너무 많거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개선이 좀 되다가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신 산모 장애 포함해서 보상 대상 범위를 시급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장관님, 동의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도 보상 금액을 확대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산모의 중증장애나 신생아에 대한 기준도 좀 변경할 것을, 현재 해외 사례나 내부 의견 조율을 해서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장관님, 대만의 경우에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나서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생아의 경우에도 재태주수가 32주 이상 또 체중은 2kg 이상이라는 이런 조건을 뒤 가지고 또 보상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산모든 신생아든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인정은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저출생 대책은 결국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아까 영상에서도 당사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관님께서도 이 내용을 다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산모와 신생아 보상 범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해외 사례와 의견 모아서 확대하는 안으로 방향은 잡고 있는데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고, 또 시행령 개정 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시행령 개정은 그러면 내년 초부터나 이렇게 시작이 가능한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일단은 확대 방안에 대한 게 결정이 되면 시행령까지 개정해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확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의견 참고해서 범위 확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답변하신 것처럼 보상 범위 확대 범위, 인정 기준 그리고 시행령 개정이 문제들을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리고 또 앞서 방송에서 나왔던 사례 구체책도 시급하게 보이거든요. 이것도 검토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말씀하신 중증장애까지 보상이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 포함해서 검토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현장은 정말 하루하루가 1달, 1년처럼 길고 힘이 들거든요. 최대한 서둘러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이런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5월부터 1형 당뇨가 체장장애로 인정이 됩니다.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장애 심사가 필수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년 예산이 27억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 약 4만 건 정도의 체장장애 신청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제도 초기 시행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심사 인력 운영 그리고 의학자문료 등 반드시 반영돼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장관님께서 복지위뿐만 아니라 예결위까지 각별히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내년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도 한 21억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십자 김철수 회장에 대한 감찰 지시에 김철수 회장이 사임을 표명했거든요. 인천지 표창부터 인종차별 논란까지 적십자사 명예가 말도 못 할 정도로 실추됐거든요. 적십자사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장관님과 복지부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국감에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포함해서 현황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사과나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하여튼 적십자사 전반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 정은경 장관님, 정권이 바뀌고 통합돌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현장과 지자체에서 저와 같은 실망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 기간 동안에 말씀드렸던 지자체 특화서비스 확충지원 사업의 예산 지급기준이 부적절하고 전체가 부족한 것도 물론이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통합돌봄서비스의 전국화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정작 현장에서 공공돌봄을 이끌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대한 고민은 이 예산안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중앙이 아니라 지역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성패는 결국 각 지역이 사람과 자원을 어떻게 엮어 내느냐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해당 지자체의 돌봄 운영을 지원하고 돌봄인력의 교육을 수행하고 또 돌봄 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기관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부문 서비스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통합돌봄의 핵심 기반이 될 사회서비스원을 어떻게 되살릴지 하는 그런 고민도 구체적인 계획도 빠져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지역별 특성에 맞

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 96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장, 이수진 간사와 사회교대)

○**김선민 위원** 제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때 지적했지만 복지부 소관 장애인 보호시설 중에서 학대피해장애인쉼터는 그야말로 가장 취약한 장애인들이 가는 마지막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대피해장애인쉼터에서 다시 성폭력이 가해졌고 그 이유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의 예산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구조적인 것에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학대피해장애인쉼터의 예산 지원 수준만 유독 낮습니다.

유사 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더욱 분명합니다. 아동쉼터의, 같은 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아동쉼터의 인건비 단가는 2025년 295만 7000원에서 2026년 360만 6000원으로 22% 인상됐습니다. 또 운영비와 사업비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학대피해장애인쉼터는 이것과 다릅니다. 내년도 인건비 단가는 275만 6000원으로 아동쉼터에 비하면 85만 원가량 낮습니다. 심지어 올해 아동쉼터의 단가보다도 낮습니다. 운영비 예산은 여전히 없고 사업비 항목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장애인쉼터에 대한 차별입니다.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인건비 기준을 유사 시설인 아동쉼터와 동일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비를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서 장애인쉼터의 예산구조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장관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무래도 피해장애인쉼터가 더 많이 손이 가는 그런 센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더 낮게 편성이 돼서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한 33억 정도가 추가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수진**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서울 강남갑 지역의 서명옥입니다.

식약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 기준 연간 약 11억 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전국의 약국을 통해서 조제에 투약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즉 쉽게 말하면 국민 10명 중 4명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서명옥 위원**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5년째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서명옥 위원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5년째 계속 시범사업만 하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산 확보를 매년 시도를 했는데 예산 확보가 번번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렇지요? 사업 지역은 매년 확대는 하고 있지만 수거 참여 약국은 100개로 계속 고정되다시피 하고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서명옥 위원 그리고 매년 수거량도 개선되지는 않고 어떤 해에는 많았다가 어떤 해에는 줄었다가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을 선정할 때 저는 좀 더 세심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 대상 지역에서 서울은 빠져 있어요. 알다시피 서울은 마약류 처방이 가장 많은 지역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서명옥 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 설계부터 타깃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현재 사업 지역을 전국구로 확대를 하었는데 서울 쪽은 그동안 폐의약품 수거 사업과 약간 중복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처방기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강남 지역 등도 포함하는 것 검토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전국 4만 개의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하고 약국의 25%를, 전국 톱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상 지역에서 빠져 있지요. 그래서 저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용 마약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동의합니다.

○서명옥 위원 그중에, 서울 중에서도 제 지역구인 강남이 의료용 마약 사용률이 가장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알고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또 일례로 요즘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 가장 핫하게 화제인 ADHD 약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서명옥 위원 그 처방 현황도 보면 전체 처방약 8600만 개의 35%가 서울에서 처방되고 있고 서울에서 처방되고 있는 것 중의 18%는 또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만큼 강남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방약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당연히 방치되고 있는 남은 마약류도 많다고 여겨지거든요. 그 말씀이 맞겠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동의합니다.

○서명옥 위원 그래서 서울 지역 전체의 참여 약국을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친다면 적어도 가장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강남구에 있는 약국이라도 몇 군데 지정하셔야 된

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과 또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처장님께서도 거기에는 동의하셨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1인당 인센티브도 3000원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5000만 원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저는 그것가지고는 어렵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여자도 적고 또 약국들도 업무 부담 때문에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 유인을 늘리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좀 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지금 인센티브가 너무 작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체감하는 인센티브를 만들지, 그런데 이것이 다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확보된다면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래서 지역 선정하는 것과 약국을 선정하는 것도 식약처에서 직접 다 하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서명옥 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지역 내 보건소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서명옥 위원 지역 내 보건소하고 지역 내 약사회하고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 있고 또 둘 사이에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 내 보건소에다가 이 사업을 조금 더 위탁을 하면서 그 지역 내 약사회하고 유기적 관계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명옥 위원 아마 지역 내 보건소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서로 협력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수진 간사, 박주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참여자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 정말 2700원에 불과하잖아요 그 부분도 조금 더 단가를 높여서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이제 마약에, 정말 힘든 국가적인 사업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저는 식약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국민들이 마약의 오남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디테일한 사업전략 짜 주시고 그 결과라든지 사업전략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 의원실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위원님.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십시오.

○서명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감사합니다.

○서명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 재정을 보니까 재정운용위원회 전망치가 4조 1000억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예산안에는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14% 국고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12% 정도 담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10년 동안 17조 정도 못 한 것은 둘째치고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는 14%에 대한 국고부담 원칙을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건보료는 1.48%를 인상한 상황인데 국가가 이런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마치 국민에게 떠넘기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존에 미지급된 것까지 예산을 반영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둘째치고 우선 14%에 해당되는 국고보조의 원칙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저희도 14% 기준을 준수하는 게 맞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율이 예산 편성 이후에 인상이 확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상향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꼭 그런 원칙을 지키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선민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이 있으셨는데 통합돌봄과 관련된 예산이 한 777억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지방정부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돼서 내년도에 시행되는 통합돌봄이 지자체 예산 편성에 매우 큰 부담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현재 계상된 이 액수로는 시범사업 예산보다도 훨씬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통합돌봄 자체의 시행을 통해서 정말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사업이 안착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우려와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은 예산 당국과 대폭적인 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도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제도의 안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전국 시군구에 다 지원하고 또 노인이나 장애인 서비스를 좀 확충하려면 한 717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고 기재부하고도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도 183개만 한다 이런 원칙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체를 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렇지는 않고 재정 때문에 재정자립도 하위 80%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에 시작이기 때문에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달성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천명하고 있는데, 2027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걱정인 게 제일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특회계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차별받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동일한 기준의 목표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도 사회복지사 종사자 가이드라인 100%가 목표로, 국정과제로도 되어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증액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동일한 기준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아울러 명절휴가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 이 문제가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반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26년도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불용예산을 활용한다거나 인건비 변경하는 등으로 조정하는 것들을 지자체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기관장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내년도 예산은 그래도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전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장관님, 보건복지 관련해서 지금 재정 상황 좋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은 항상 숙제입니다.

○**안상훈 위원** 굉장히 팍팍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안상훈 위원** 올해 쓰는 것만 해도 지금 현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까지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과학적 근거하에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그것 보고 또 중요도 봐 가지고 우선순위를 잘 가르마 타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동의합니다.

○**안상훈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번 예산을 살펴보니 이게 선거 때 공약 그리고 국정과제 중심으로 너무 경도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부처에서는 이것 한번 필터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예산소위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오늘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과제 때 여야 위원님들이 공히 지적하셨던 게 사회서비스 쪽의 산하기관들 제대로 일하기에는 인력 등 지원이 태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빠져 있고요. 이걸 다시 논의 과정에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AI를 여러 분야에 확산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상용화로 될 준비가 지금 복지부에서 돼 있는지, 제가 꼬치꼬치 복지부에다 계속 자료 요청,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속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가 AX-Sprint 이쪽에 붙어 있고 부처별로 이걸 좀 모아 보자 그러니까 서둘러 낸 감이 너무 많은데 보건 쪽도 마찬가지인데 복지 쪽 같은 경우에는 복지 수요자들의 욕구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욕구 해결에 동원되는 전문가들이 이런 걸 AI가 하는 게 좋을지 사람이 하는 게 좋을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바텀업 방식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정한 다음에 이게 기술 구현이 어떤 게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 가지고 매칭시켜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구도를 보면 일단 AX-Sprint 위에서 때리고 복지부에서는 서둘러 가지고 상용화 관련해서 몇 개 과제를 했고 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과제가 뭔지도 모르고 하면서 그것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걸 또 예타까지 면제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AI, AX 주도하는 쪽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도 복지부에서 조금 절제 모드로, 더 좋은 제대로 된 쪽으로 이게 실제로 될 수 있도록 밑작업을 올해 하시는 쪽으로 예산을 써도 쓰시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것 중의 하나가 아동수당 지급인데 장관님, 아동수당의 정책 목표가 뭐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이들의 양육과 보육에 필요한, 그런 아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양육, 보육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상훈 위원** 사실은 조작적으로 구체적인 정의까지 제가 꼬치꼬치 묻고 싶지만 모든 정책이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정책 목표가 굉장히 심플하고 포커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서 내놓고 있는 아동수당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지역별 차등 지급 이것 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정책 목표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아동에 대한……

○**안상훈 위원** 그러면 5000원 더 주면 이사를 갑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게 이사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양육이나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안상훈 위원** 자, 지역별 생활물가를 비교해 보시면요—이것은 지방연구원이나 다 자료가 있으니까—똑같은 돈을 전국에 주면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은, 구매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것 좀 생각해 보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안상훈 위원** 그리고 이걸 또 지역상품권으로 지금 하는 것 이것 문제의식 없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역상품권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재도 법상으로 가능하고 또

할 수 있게는 되어 있고요. 그것은 지역이……

○**안상훈 위원** 그런데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해서 문제의식이 없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부분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지자체의 의사결정 과정이 또 남아 있어서 그걸 할 수 있게 예산에 대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상훈 위원** 제가 1분만 좀……

○**위원장 박주민**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지금 현재 지역상품권 방식으로 아동수당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는 한 여섯 곳, 제가 숫자…… 인천, 성남, 정읍, 순창, 강진이 양육지원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성남시가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위원** 보편수당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목표는 그걸 받는 사람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쉽게 써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안상훈 위원** 지역상품권은 그 자체를 지금 제한을 하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지역민 의사를 바꾼 반영한다고는 돼 있지만 제가 알아보니 이것을 100% 반영하는 무슨 수단도 없고 그냥 지자체장이 알아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구매에 관한 본인들의 자유 의지가 제한되는 것은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것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례라는 형태로 규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상훈 위원** 아동수당 하는 나라가 여럿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게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거기에 부합하도록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다시 따지셔 가지고 이런 사다리들을 좀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수당의 정책 목표는 아동이 기본권을 인정받고 양육이나 이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책 목표라는 점은 그 원칙을 확인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마치셨지요?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입니다.

장관님,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국민권익위가 건보재단에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급여나 지원금을 또 인건비까지 과다하게 나눠먹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 부분이 과장도 있고 또 억지 매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러한 지적이 자기들이 권익위에서 직접 조사를 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내용은 작년 12월에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

결한 사항이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맞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래서 내용과 사뭇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먼저 들고 나온 게 권익위원장이라는 분이 유철환 위원장인데 이분이 정말 행동거지가 조금 똑바르지 못한 그런 점이 많이 지적돼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정을 내릴 때도 이 위원장 때고요. 그래 가지고 이 사안으로 해서 반부패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불행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또 위원장이 직원에게 마사지를 시켜 가지고 또 자녀를 관사에 우선 거주시키고 등등 이래서 처신이 약간 문제가 있는 분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꼭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 명예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록도 병원 관리 구역과 병사구역 관련해서 제가 몇 번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11월 7일 날 제가 고흥 현지에서 노승한 병원 자치회장을 비롯한 주민들 몇 분을 뵈었습니다, 대표단을.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병사구역 조정 관련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듯한 말이 나와서 내부적으로 고흥군과 함께 주민의견조사를 했답니다. 해 보니까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79%가 병사구역 축소 조정을 희망한다 이렇게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흥군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결론을 좀 내려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건의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장관님께 제안하는데 꼭 좀 챙겨서 주민들의 간곡한 희망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말씀 주신 주민들 의견수렴 조사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냉난방비 그리고 양곡비에 대해서 쌀값 정도만 50% 국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제일 시급한 게 운영비도 있지만 부식비입니다, 부식비. 반찬 없는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부식비를 지자체가 여유가 있는 데서는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것도 안 된 데는 주민들이 자부담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부식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 특히 조리하는 분들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것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가 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예산 편성이 안 됐습시다, 부식비에 대해서. 그래서 증액이……

1분만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액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답변 드릴까요? 부식비 지원에 대해……

○이개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이따가 한꺼번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러면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필요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사회복지사들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예요. 호봉제를 실시를 하는데 가이드라인의 85%를 적용한 데도 있고 그렇게 되면 85% 적용하면 20호봉이랍니다. 그리고 100%는 31호봉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가이드라인 전체를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릴 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답변 드릴까요?

○이개호 위원 예, 답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경로당 부식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경로당 지원 예산이 내년부터는 지역특별회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역특별회계 보조금을 저희가 편성할 수는 없어서 부식비는 일반회계로 별도 사업으로 신설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국회 증액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현재는 95, 91%로 부족한데 이 부분을 100%까지 하려고 하면 국비만 한 167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개호 위원 167억?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필요하다고 추계하고 있고 또 지방비가 160억 원 소요가 되는 거여서 재정 당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최보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보운 위원 저는 오유경 식약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의료용 마약류 회수 폐기사업 질의인데요, 의료용 마약류는 말기암 환자 등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이지만 관리가 부실할 경우에 오남용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 요인이 되는데요 실제로 세종·울산·청주 등에서 남은 마약성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한 적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보운 위원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의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여전

히 규모가 작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이 2022년에 시작됐지만 예산은 매년 1억 8000만 원 수준에 머물렀고 2025년 돼서 2억 3000만 원으로 소폭 증액된 정도고 그 결과 참여 약국이 100개소에 불과해서 충북·강원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최보윤 위원 이런 가운데 국민신문고와 환자단체에서도 사망 환자 잔여 마약류 처리 방법 문의와 수거 사업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처장님 이런 현장 목소리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최보윤 위원 식약처에서도 참여 약국 확대나 인센티브를 통한 반납 활성화, 대국민 홍보 강화 또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및 수거 방식 다각화 등 개선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개선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현 예산 수준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처장님, 식약처가 준비하고 있는 개선 과제들 가운데서 일단 어떤 부분이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해당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필요한데 현재 약국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까 서명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도 앞으로 실태조사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국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테이크 백 데이 그것을 내년에 한번 마약 퇴치의 날 그 주간에 시범 실시하려면 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더 배정된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보윤 위원 마약류 관리의 핵심은 단속이 아니라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현장에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관리 체계가 자리잡도록 특별히 또 이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보윤 위원 예.

정은경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 복지부, 식약처 신규 사업 가운데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최보윤 위원 앞서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과 안상훈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 관련돼서 조금 잘 파악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AI 제품에 대한 기업 개발 제품들이 1, 2년 안에 시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 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2년간 780억 투입 예정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최보윤 위원 이 사업은 산업부를 비롯해서 10대 부처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AX 스프린트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역점 두고 있는 AI 신산업 육성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최보윤 위원 저는 AI 기술을 복지에 접목하자는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국회에 입성하게 된 계기도 AI for Humanity, 기술은 인간을 향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절차도 설계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편성됐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절차 문제입니다. 이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내에 적정성 검토를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을 먼저 반영을 하고 검토는 나중에 미룬 부분인데요. 이게 2년간 78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없이 예산부터 태워 버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차를 사실상 거꾸로 밟은 것으로 국가재정법 취지 위반 소지가 큼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을 추후 밝혀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상용화가 어떤 의미인지가 불명확한데요, 사업 설명에는 AI 복지서비스 상용화라는 말이 반복이 되지만 이게 국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을 말하는 건지 시제품 완성을 뜻하는 건지 인증 조달까지 포함하는 건지 단계별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과지표가 추상적이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정량 목표가 없다 보니까 적어도 몇 개 지자체에 도입됐는지 몇 명의 이용자가 쓰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지표는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없고 그러면 집행이 끝난 뒤에 이 사업이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판단할 기준조차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없이 사업이 계속되면 결국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만 책임을 지게 될까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과 압박이 품질과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1년짜리 단기 과제, 2년짜리 중장기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빨리 결과부터 내야 되는 구조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AI 관련된 이런 막대한 사업에서……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박주민 예.

○최보윤 위원 막대한 사업에서 저도 장애 당사자고 또 여러 의료 부분에서도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장기적 과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 단기 과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고려 없이 너무 단기간만 추진이 된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예산은 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 설정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또 이런 복지 현장은 사람의 삶과 안전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역점을 두는 사업이라고 해도 이처럼 준비가 미비한 수백억짜리 사업을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싶고 또 차라리 한 해 늦더라도 사업 적정성검토를 내실 있게 마무리해서 설계가 먼저 되어서 그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훨씬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박주민 예, 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말씀 주신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는 과정에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절차상의 예타 면제에 관련해서는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적정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재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상의 취지도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이전에 예산편성이 불가하지는 않다는 그런 판단이고 이 적정성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또 그 이후 예산 반영할 때도 그 부분을 참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어서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상용화나, 이게 어떤 단계냐라는 건데 저희가 상용화하는 기업을 지원해서 기술을 개선하고 인허가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고 또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개발된 것들을 현장에 적용해서 지자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또 1단계·2단계, 타입 1·2 이렇게 나눈 것도 타입 1은 이미 인허가 받은 것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사업으로 확산에 대한 초점을 두고, 타입 2는 2년 정도로 개발이나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틀을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지금 계속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어떤 사업이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별로 목표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제를 선정할 때 그 과제에 맞는 성과지표나 관리지표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장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로드맵 만드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건이나 복지 분야에 이런 AI 기술을 접목하는 게 좀 늦어진, 뒤쳐진 그런 상황에서 저희 부처는 인프라보다는 활용 부분에 방점을 뒀서 현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잘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겐 어쨌건 국가재정법 취지의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연내까지 확인하고 검토 완료 예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복지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잘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법적인 부분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민 장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태 위원 대전 서구갑 장종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2026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이 2025년도 대비해서 약 9.2%, 2조 3000억 원가량으로 확보를 했고 일자리 수도 115만 2000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상당히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에서는 양적인 확장에 비해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몹시 아쉽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 아동수당 도입 이후 계속 10만 원으로 지금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건데 시물레이션을 통해서 2018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실질 아동수당을 계산해 보면 2024년도에는 약 11만 4000원, 내년도쯤에는 한 12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 및 학령기 사교육 비용 증가, 양육 비용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수당 기준금액을 이렇게 고정하는 현 제도가 매년 지원의 적절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가치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재정에 대한 부분과 또 이게 법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종태 위원 저희가 지난번,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을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연령 확대 이런 측면에서 많은 재정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장종태 위원 제가 작년에 질의했을 때 이기일 차관께서 직접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답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또 비슷한 겁니다마는 노인일자리의 임금도 적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항상 적용, 2022년도의 임금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이것도 물가상승률을 좀 적용을 해서…… 이대로 놔두면 결국 어르신들의 공익적 일자리 사업의 보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걸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확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 역시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어서 너무 아쉽다.

이 부분은 아마 기본 취지가 취약 어르신 계층들의 소득 보전이 가장 큰 목적인데 가만히 놔두고 진행을 하다 보면 매년 임금이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좀 짧게 하시고, 내가 하나 더 질의할 게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질문 주시면 한꺼번에 답변하겠습니다.

○장종태 위원 이것 식약처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작년에 제가 국감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서, 이 법은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우리의 중요한 정책의 전환인데 다만 그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제반 법적인 절차를 거쳐

서 승인받고 영업을 해 온 전국의 모든 업 종사자들이 지금은 전환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생계가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민원을 저희 의원실로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들과 대화의 시간을 한번 갖고 얘기를 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전적으로 식약처 소관만은 아닙니다. 타 부처에도 연관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평생 이것으로……

저도 1분만 더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주민 예.

○장종대 위원 한평생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던 사람들이 전환을 한다 또 그 업을, 문을 닫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대화가 단절돼 있고 심지어 관계법의 불법 가능성이나 통계의 부재 등을 사유로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식약처장님이 대화할 시간을 한번 갖고 민원인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그런 절차를 한번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아까 못 하신 말씀 있고 처장님께서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공익형 활동비 단가 인상이 23년도에 인상되고 계속 동결되어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한 1만 7000개 정도 자릿수를 늘리기는 했지만 단가 조정을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단가 인상할 경우에는 현재 한 29만 원에서 29만 9000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325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과정 중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위원님, 개 종식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현장의 의견, 현장의 어려운 부분들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마치셨지요?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광주 북구를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문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쩌면 되게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문제일 수 있으나 복지부가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 어떻게 한발 더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전진숙 위원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을 월 4.17%로, 주거용재산을 월 1.04%로, 금융재산을 월 6.26%로, 자동차는 월 100%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반재산은 약 50.04%가 되고요. 금융재산은 연 75.12%, 주거용재산과 자동차는 12.48% 그다음에 1200%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의 환산 비율 월 0.33%와 비교해 보면 일반재

산은 12.6배 수준이고요. 기초생보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이렇게 높게, 방금 말씀드렸던 기초연금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전진숙 위원 다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보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기초연금처럼 완화할 경우에 탈락 가구가 도대체 얼마나 유입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경실련과 제가 같이 찾아본 건데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 탈락자 2만 6084가구 중에 83.1%가 다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 탈락자 1만 9767가구 중에 71.2%가, 즉 1만 4076가구가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2년에 1억 7000만 원짜리 낡은 목조주택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기초생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돌아가신 창신동의 모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었죠. 결국은 우리가 하우스푸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하기에는 되게 쉽지 않지만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어떻게 하실지 조금 이따 답변 같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돌봄이 내년 3월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보니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 중에 돌봄 연계체계 구축 예산안이 27억 1500만 원인데 광역시도 지원 예산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광역 수준에서 연계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민간 그룹 발굴도 해야 됩니다. 컨설팅이나 역량 강화들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 시도별 예산이 없어서 이것 최소한…… 제가 광주에 조금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주 최소 금액이 1억이라고 하는데, 2억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통합돌봄의 가치가 노인 정책의 틈새 돌봄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서의 돌봄으로 전환시킨다, 국가가 돌봄 국가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 첫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국가가 초기 정착을 하도록 해서 전체 시군에게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빠져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4억, 6억, 10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자체 매칭인데 저는 최소한 229개 지자체에는 일괄 지원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초고령자 또는 의료취약자를 플러스시키거나 또는 하나를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지방재정자립도, 사회복지지수 이런 부분들을 적용한 차등 지원은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지난 국감에서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 지금 노인 대상 하는 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전진숙 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를 하려고 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내년 예산을 보니 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가 일정 정도 시범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증액이 순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1분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민 예.

○전진숙 위원 통합돌봄 정보화 시스템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통합돌봄을 받는 지원자 대상으로 봤을 때 다자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광역 시도 차원에서 지자체 간 자원관리 연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보화 설계가 굉장히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예산이 23억 66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67억 7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이 상황에서 아주 적합하고 정확한 정보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하고 실제 돌봄 대상자로부터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탈락의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으셔서 가지고 제가……

먼저 생계급여에 대한 재산 소득환산 기준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걸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에는 환산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 아까 100%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 소득환산율은 적용 예외돼서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좀 더 지적해 주신 기초연금하고의 비교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종합계획 마련하면서 개선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일반재산 4.17%의 기준을 조정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좀 높다라는……

아마 재정추계까지 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변경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합돌봄에 관련해서는 광역시가 컨설팅 역량 강화 등의 사업에 광역 단위의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 그리고 또 제외된 46개 시군구를 포함한 전국 시군구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반영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대부분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예산인데요. 정부 예산안에 담지를 못했는데 국회의 심의 과정 중에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예결위 그리고 또 기재부와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마치셨지요?

○전진숙 위원 예.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백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장관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보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는 AX-Sprint 300 프로젝트 추진하면서 생활밀접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적용·상용화하겠다고 급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 보시면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안에 복지부를 비롯한 10개 부처에 8920억 원을 신규 편성했고 복지부에서는 복지 분야 300억 원, 보건 분야 200억 원 총 500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복지·돌봄 분야에서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봄위기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맞습니다.

○백종현 위원 복지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은 화면과 같이 5개의 투자 방향을 설정했으며 16개 과제에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준비된 것과 준비 안 된 사업 예산만 먼저 바뀌었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복지부가 설정한 5개 내역 중에 3개를 사회보장정보원이 담당합니다. 고독사 AI 심리케어, RAG 기반 복지서비스 AI, 스마트홈 재가돌봄 융합기술 3개입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맞습니다.

○백종현 위원 그런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 운영체계, 관리운영지침,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연구용역조차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품을 선정하고 지원방법과 지원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은 300억 원 받아 놓은 상태고 내년 상반기에 과제를 선정하겠다는 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복지 파트에 대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말씀 주신 대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집행을 할 예정이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업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종현 위원 또 다른 문제는 투자방향을 설정한 내용과 유사한 사업이 이미 정부안에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복지부 예산안을 보니 에이지테크 기반 고령친화산업지원이라는 신규 사업에 15억 2000, 이 사업은 2023년에 있던 고령친화산업지원사업의 연장 사업입니다.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중 에이지테크 부분은 AI 기반 고령친화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에이지테크 기반 고령친화산업지원사업도 똑같습니다. 특히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를 통해 AI, 로봇 등

첨단 융복합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장관님, 이 두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앞의 사업은 AI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령산업에 대한 산업 지원이고 예산 금액이 과제당 한 1.4억 정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고 있는 고령친화제품 신속 상용화 부분은 저희가 자율적인 보텀업 과제가 아니라 좀 더 필요한 기술을 지정해서 공모하는 또 상용화 가능한 단계에 좀 더 포커싱해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어서 사업의 범위가 뒤쪽,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AI 중심의 톱다운 과제에 어떤 저희가 필요한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백종현 위원** 그런 말씀 주셨지만 결국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기존 고령친화산업지원사업에서 AI라는 단어만 앞에 붙여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복지부에서는 AI 사업을 통해 고독사 문제 해결, 돌봄인력 업무부담 경감, 돌봄의 질 향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정작 현장은 방치하고 AI를 말하면서 미래 서비스 질 향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상황을 보십시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기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응급관리요원은 과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26년 예산안에 응급관리요원 인력……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예.

○**백종현 위원** 증원을 단 한 번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와 똑같이 766명 인건비만 반영했으며 9만 대의 장비 추가도입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지금 당장 서비스를 기다리는 4만 명의 국민과 과로에 쌓인 766명의 관리원을 방치하면서 AI만 3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게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양적인 확대도 필요하고요. 또 그런 안전서비스를 하는 데 AI를 적용해서 위험감지나 오탐지를 감소하는 등 성능을 개선하고 또 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질적인 개선 부분이 두 가지가 다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두 가지 사업을……

○**백종현 위원** 현재 제도는 무너지고 있는데 복지부는 단순히 이재명 정부의 AI 기조에 맞춰 급하게 유행만 좇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부터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복지입니다. 아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말씀 주신 양적인 확대와 또 AI를 접목한 질적인 확대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장관님, 복지는 정말 기댈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주영 위원 지금 아동 관련해서 예산안 보시면 51페이지에 보면 아동수당이나 부모 급여의 경우에는 5000억 이상, 2000억 이상 이렇게 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보호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유관기관에 대한 것을 보면 거의 전년 동이거나 감액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39페이지에 보시면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 및 연구 이것은 지금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2억 원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동을 다루는 특수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력 양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굉장히 소홀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면 장기적으로 정책이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권리보장원의 급여 현황을 좀 봤는데 공공기관 전체 평균 보수의 거의 70% 수준밖에 안 돼요. 여기만 유난히 낮습니다. 너무 낮아요. 제가 정확한 액수는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23개소 중 최하위고요. 평균의 7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업무는 사업의 질적 향상이나 또 아동들이나 소외된 계층을 본다는 업무 특수성 때문에 아동과 소외계층과 그 외의 것들을 함께 연결하는 특수성을 생각을 하면 장기근속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부처 중의 하나인데 처우가 이러면 장기근속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경력자가 배출될 수 없는 구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봤는데 입양체계 관련해서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하셔야 되시고 인프라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30억에 그 외에 추가한 몇 가지 인프라에 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또 4개소가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비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관리비용도 제대로 책정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최소 50억 이상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여기 지금 30억 전후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말씀하신 아동권리보장원 특히……

○이주영 위원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식약처장님, 코덱스(CODEX) 첨가물분과 의장국은 이제 종료가 됐는데 다음 주에 미국에서 이제 그만하겠다고 해서 가공과채류분과 우리나라에서 결정 나지요, 의장국 할 건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이번 주에 결정이 납니다.

○이주영 위원 이번 주에 결정 나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이주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7억이었던 게 1억 2000으로 줄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그게 9월 달에 저희가 참여를 의장국으로 하겠다고 하고 미국에서 지지를 해 줘서 9월에 결정 나서 정부 예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번에 이것 조금 늘려서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가공과채류가 되면 K-푸드가 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주영 위원 특히 지금 문화적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을 때 김치, 고추장 이런 것들 다 가공과채류분과인데 이것 최소한 4억, 5억 정도는 있어야 기존 사업이 계속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장관님, 같이 좀 챙겨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주영 위원 주신 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응급·외상 관련해서 응급의료 지원 및 운영 지원 강화라고 돼 있는데 이것 지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심의 의결돼서 전체적으로 수가 다 감액될 예정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주영 위원 공공정책 수가로 바뀔 거고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1000억 원이 있는데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이 629억에서 1764억이 됐어요. 그런데 1764억 중의 1000억이 순수 지원이 아니라 융자 지원이에요. 이것 그냥 갚으라는 거고 빚에 대한 이자만 조금 감해 주겠다는 건데 일단 이 과정 자체가 첫 번째 수요조사도 안 했고 이용 현황 파악도 안 됐고 이전의 융자사업이랑 지금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니까 내용 자체가 좀 다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주영 위원 그런데 의료의 공공성 맨날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환자도 받아라, 책임도 다 법적으로 저라 하는데 돈 낼 때만 되면 정부가 빠집니다. 그러면 공공성이라는 얘기를 하지를 말든가,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응급의료는 그냥 하면 적자지요,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정부는 이자만 좀 줄여 줄 게, 나머지는 알아서 너희가 돈을 털어서 메워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비급여 진료는 굉장히 나쁘게 표현을 하면서 통제를 하겠다고 해 뭐 어찌라는 거냐 하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융자가 아니라 지원을 직접 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지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제는 적자 보전이 아니라 시스템 구축에 돈을 써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뒤에 보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안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신 자료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죽 보시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예산 거의 다 전년 동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 이송체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모에 대한 것도 소아에 대한 것도 이제 다시 할 거라고 하셨고. 그런데 이송체계 관리는 오른쪽 페이지, 125쪽의 아래쪽 보시면 13.6% 또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현장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도 2억이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 130페이지 보시면 119구급대 지원은 또 43억이 증액이 돼요.

지금 행안부 쪽에서 119 관련해서 이송 책임에 대한 얘기가 있고 보건복지부 영역에서

는 병원 전 단계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해서 효율적인 이송을 해야 응급의료가 정상화가 되지 아무 데나 던져서 무조건 받아라 하고 각각의 병원에 용자 형태로 지원을 하면 이 시스템에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가겠는가 하는 걱정이 매우 많이 되고.

지금 12월 중에 소아 부문 응급의료체계 협력 강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안 발표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주영 위원 그거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저희 의원실로 주시면 같이 검토하고 내용에 대해서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박주민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아동권리보장원은 전문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최소한 인건비 10% 인상하려면 한 9.9억 원, 100%까지 하려면 그거의 한 3배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공적 입양체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24명 정도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것도 최소한 한 14억 원 정도 증원은 필요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급의료 관련된 예산은 저희도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데요. 다만 정부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낮은 이자율로 융자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최대한 이 사업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게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 반영하고 직접투자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뿐만이 아니라 응급의료수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중요한 과제여서 현재 개정법안도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소방청과 이송·전원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계속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장관님, 지난 국감 때 지방의료원이 직면한 현실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올해 6월 가결한 기준 35개 중 29개 지방의료원이 적자였고 그 규모가 지금 484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3년 연속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에 따르면 연말 기준 약 15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희승 위원 35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올해 6월 기준 여전히 62.7%에 불과합니다.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헌신한 결과 일 반진료 중단과 수익 감소로 경영이 악화됐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재정 위기는 경영의 실패입니까, 아니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책무 수행의 결과입니까? 어떻습니까, 분석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마 코로나의 영향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요 경영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승 위원 지금 금융기관 등을 통한 차입, 물품대금 지급 유예 등 비상경영을 실시 중이지만 유동성 위기 해소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5년간 1만 명이 넘게 공공의료 현장을 떠났고 임금체불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원은 임금체불과 노사분쟁 등 경영 한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큰데요.

이처럼 공공의료원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돈과 의료인력의 이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영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보다는 경영 혁신, 필수의료 강화 사업 등 우회적 형태의 제한적 지원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장관님도 지난 30일 종합감사에서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하셨습니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6년 예산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심의 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좀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 답변하셨는데 현재 어떤 부분 어느 정도 늘리는 방안 협의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는 시설장비 확충이랑 운영비 지원 해서 한 2000억 정도가 전년 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한 600억 가까운 예산 증액에 대해서 현재 여러 당국에 대해서 설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네요. 저희 보기에요 633억 정도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어쨌든 적자 보전을 위한 공공의료 발전기금 조성 또는 공공의료 수가제 도입 등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예산뿐만이 아니라 수가 부분과 또 만약에 필수의료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아마 특별회계 예산도 일부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 5월 정부는 경로당에서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8월 말 기준 전국 평균 식사 제공이 약 3.5일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 독거노인이 늘고 있는 만큼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동의합니다.

○박희승 위원 작년 12월 경로당에 대해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박희승 위원 내년 1월 시행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런데 부식비 지원 예산편성이 지금 없습니다. 정부는 국비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보조금법 시행령이 추가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국비 반영이 안 된 건데요.

국회 단계에서 심의를 통해 예산편성이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무래도 지자체의 부담을 좀 줄여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박희승 위원 지금 저희가 뽑아 보니까 이것도 약 460억 원 정도 경로당 부식비 지원 예산 신규 반영이 필요한데요. 기재부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잔액으로 집행하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저희가 쓸 수 있는 데가 한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 지원 예산이 내년도부터는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식비를 지원하려면 별도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사업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하여튼 검토도 좋으신데 일단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윤 위원 존경하는 이수진·김미애 간사님과 본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이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장관님, 기재부하고 필수의료특별회계 협의를 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계속 논의하고 있고 특별회계로 신설하고 또 국가재정법 까지 개정을 해야 돼서 그 일정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 위원 올 연내에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거를 목표로, 지금 국가재정법이 같이 개정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기재위 쪽에서도 같이 해 주셔야 돼서 그 부분을 기재부하고 같이 일정을 챙기고 있습니다.

○김윤 위원 법 통과돼서 제대로 시행되려면 이게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지부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복지부가 그걸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복지부 종합계획이 나와야 시도가 시행계획을 세울 수 있고 시도의 시행계획이 잘 세워져야 필수의료특별회계의 소중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기재부하고 적극 협의하셔서 실태조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어서 소아의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아이가 아픈데 갈 병원을 못 찾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년째 소아과 오픈런으로 불리는, 부모들이 아이 아플 때 갈 병원을 못 찾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복지부의 주먹구구식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부가 정한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가 있는데 이 의료취약지 기준을 충족한 곳도 지금 지정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전남 완도, 강원 정선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의 의료기관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취약지 지정이 해제된 곳의 의료기관에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약지 지정된 곳 18곳 중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한 곳뿐입니다. 소아 의료취약지 예산을 늘리고 지금 지원받지 못한 곳에 대한 예산이 쓰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할 테니 한꺼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야간·주말에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소아 외래의 자체 충족률, 그러니까 야간·주말 진료 공백이 적은 곳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많이 지정되어 있고 야간 외래 공백이 심한 자체 충족률이 낮은 지역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률이 거의 낮거나 아예 없는 곳들이 다수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작년 국감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025년에 신규 지정된 곳이 노란색 막대로 표현된 곳인데 역시 자체 충족률이 높은 곳이나 취약지라고 보기 어려운 곳에 대부분의 신규 지정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했는데 기존의 사업 방식을 고수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소아과 의사가 있고 의원이 있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는 곳과 소아과 의사가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곳과 아예 소아과 의사도 없는 곳으로 구분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지역 가산이나 소아과 전문의 가산을 확충해야 달빛어린이병원 하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시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개선 방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 저희가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아·청소년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니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답변드릴까요?

○김윤 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질문이 있어서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러면 먼저 질문하시는 게……

○김윤 위원 그렇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오늘 AI와 관련된 질의들이 많았는데 이재명 대통령님 시정연설 중에서 공공 부분의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의 예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국가건강검진 사업 중의 유방암 검진에……

1분만 더 주시면……

○위원장 박주민 예.

○김윤 위원 AI 판독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 검

진에서 AI 판독 기술을 사용하면 양성 예측도, 그러니까 정확도가 15% 내외로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판독에서 AI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AI 응용제품 상용화 사업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보건복지 분야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느냐 여부가 사실상 성공적인 상용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들이 기술 승인은 나고 비급여로 사용된 채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적용이 안 되고 실패로 끝나는 경우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아서 이 상용화에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포함되어서 이 상용화 계획을 논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 보고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장님, 답변……

○위원장 박주민 답변을 쪽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말씀 주신 의료취약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접근성 취약도와 의료 이용률을 가지고서 시군구 단위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취약지 중에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면 그다음 연도에는 취약지에서 제외되다 보니 지원받는데는 이미 그 당시에는 취약지가 아닌 걸로 이렇게 미스매칭하는 정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거는 취약지에 제대로 선정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도 확대가 필요한데 지역적인 분포의 격차가 좀 많습니다. 아마도 참여하려고 하는 병의원이 취약지에는 늦은 야간 시간까지 운영을 해도 환자 수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되다 보니 아마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제한이 좀 있는 것들이 한계……

○김윤 위원 환자 수는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지역적으로……

○김윤 위원 사업 디자인이 현재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디자인을 좀 개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래서 말씀 주신 그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방암 검진의 영상판독에 AI를 이용한 판독을 도입하는 것은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검증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하는 방안을 한번 공단 이랑 협의해서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그 상용화 부분은 기허가 받은 제품이 시장으로 들어오려면 신의료기술평가도 받아야 되고 보험에 등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허가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근거를 만드는 데 이미 지원하는 걸로 사업이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가 말씀드린 타입 1이라는 게 그런 유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보험급여 전략이나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됐습니까?

달빛어린이병원 관련된 보고는 저희 의원실에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장관님, 앞서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통합돌봄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208억 정도가 증액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모든 지자체로 전체를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고보조율도 서울하고 그 외 지역이 30, 50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50, 70으로 올리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평균지원액이 2.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5.4억 정도로 올리는 문제.

그리고 내년부터 장애인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장애인 3.6억 하면 한 지자체당 약 9억 정도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 지원이 읍면동에 2400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한 2배 정도…… 원래는 해당 여러 단위에서 7000명 이상 늘려 달라고 했는데 한 4800명, 그러니까 2400명 하셨습니다. 한 4800명까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208억 정도 증액이 돼야 겨우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광역시 지원하고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까지 포함하면 더 금액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최대한 증액 수요에 대해서 정리해서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거는 이제 새롭게 정착하는 거니까요 예산이 지금 너무 쥐꼬리만하게 돼 가지고 이 예산을 제대로…… 제가 지금 제기한 것도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도 해야지 이게 돌아가는 체계가 되니까 그거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동의합니다.

○남인순 위원 방금 사회서비스원 말씀하셨습니다. 96억 정도 증액 더 노력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고보조율을 올리신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통합돌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전문기관인데 다른 데 건보공단, 연금공단 이런 데는 다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 사서원만 지금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중앙 사서원이 AI 돌봄지원 관련해서 추가로 한 19억 5000 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도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도 15개 개소에 12억씩—중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포함하면 207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96억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더 힘을 내시

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금보험료가 지금 오르게 돼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되는데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확대를 하시긴 하는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지원 기준을 월 소득 80만 원으로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 있다는 거 여러 번 지적 드렸으니까 최소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수준이 월 103만 원이거든요. 원래는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이 146만 원인데 그 기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103만 원으로 상향을 하면 지원 대상이 약 73만 명에서 186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약 2100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계속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식약처장님, 내년도에 297명 증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본부가 66명이고 평가원이 231명이예요, 증원 요청이. 이게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고 예산까지 확보됐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지금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인력이기 때문에 아직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확보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인순 위원** 예산이 지금 162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열심히 뛰셔야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위원님 적극 도와주십시오.

○**남인순 위원** 장관님, 장관님도 돌봄인력과 돌봄정책과 지·필·공 등등 해서 인력 확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행안부하고 계속 수시직제, 저희 복지부 인력하고 또 지자체 기준인건비 반영하는 부분 계속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남인순 위원** 질병청장님, 저희가 사실 항생제 관리를 그래도 꽤 해 왔었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사용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2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이 좀 더 증액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구도 더 하셔야 되고. 감시체계 구축에서 충남권역이 누락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충남권역이 누락되어서…… 거기도 한 3억 7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계속 대국민 홍보 등등 해서 예산이……

10초……

○**위원장 박주민** 일단 1분 더 드리세요.

○**남인순 위원** 그래서 합쳐서 예산이 더 필요한데 지금 재정 당국이랑 얘기하고 계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저희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사업 등등 또 연구용역 등등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의원실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남인순 위원 예산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총 8억 5000 정도 더 증액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장님, 진짜 제가 현장에서 들어 보면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속도가 좀 높아져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부처에 물어보면 인원 문제를 얘기하세요, 그 어려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장관님도 같이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장 박주민 남인순 위원님은 다 마치신 거지요?

○남인순 위원 예.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장관님, 발달장애인법 제가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돼서 10월부터 재산관리지원 사업이 원래 시범이었다가 이제 본사업화 되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예지 위원 국가가 책임을 지고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사기나 갈취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지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제도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어요, 이번에 공단에 내려갔다가요.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사용자, 이용하시는 발달장애인분들께서 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본인 재산이 얼마가 남았고 얼마를 썼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업무도 그 한 분 늘리시는 것도 어렵잖아요, 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이걸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업무 하실 때 재산 관리를 아직 수기로 하십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예지 위원 관련한 예산 증액이 필요해 보이는데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정보화 시스템 구축하는 데 동의합니다.

○김예지 위원 정보화 시스템 구축 그 두 가지 같이…… 여기서 업무 보시는 분들도 수기로 하시지 않아야……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지금 한 곳에서만 기관이 정해져 있고, 재정계획 수립할 때 도와 주시는 기관이 현재 한 곳만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예지 위원 지역에도 본사업화 되려면 지역 격차가 없으려면 필요할 텐데 관련 예산도 확보하고 계신 거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 부분도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확보가 필요해 보여요. 한 곳에서 본사업화 되면 이용인분들이 더 늘어

날 텐데,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예지 위원 이것도 확보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정보화 시스템과 지원기관 예산 확대 검토…… 협의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검토 말고……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제가 국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학대 지적하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일인데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인 노보전에서 학대 사례 판정받았을 때 등급 하락시키는 그 평가에 반영하기를 제가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심평원 또한 요양병원 평가에 대한 사례판정 결과를 공유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해서 향후에 노보전의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노보전 보면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역 노보전이나 또 쉼터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또 노인학대 조사·판정 전문성을 강화해서 전문가 양성을 해야지 이런 전문성도 강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내용도 필요하고 또 노인학대 분쟁사례 시 조정을 위한 중앙사례판정위원회의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도 필요해 보여요. 예를 들어 법률 자문이나 이런 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관련한 예산도 확충이 필요해 보이는데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동의합니다.

○김예지 위원 이것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잠시 제가, 화면 좀만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감소했을까요?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제가 이 정보의 소스를 잘 몰라서요.

○김예지 위원 뉴스입니다. SBS 뉴스였고요. 제가 그냥 만든 자체 제작 아니고 AI 제작 아닙니다. 이거 AI 얘기하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아닙니다.

○김예지 위원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복지 이거 너무 많이들 지적해서서 저는 거기다가 부연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거 너무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는데 재정 한번 5억, 3억 이거 늘리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전에 예타 하는 것만 재정 확보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AI 복지·돌봄 혁신 중장기전략 및 정책연구 중이지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TF를 만들어서 계속 기업이나 지자체 조사하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예지 위원 보통 이런 거 연구용역해서 연구되어야 그다음에 뭘 시작하겠다 하시는데 이거 먼저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정말 절차상 맞지도 않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AI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관련해서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신체적 안전에 갑자기 위협을 느끼거나 위해하지는 않지만 저런 로봇 관련 사업

은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상용화를 못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복지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물론 할 일이 아니라고 해서 아예 빠지시라는 것은 아니고 조언을 주실 수 있고 또 임상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거는 산자부나 과기정통부나 중기부 정도에서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그 개발이 돼서 어느 정도 시제품이 나오면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 돌봄에 투입할 수 있는가? 여기서 적정성을 확인하고 또 안전성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이 몇백억짜리 이거를 저희가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우려 사항은 잘……

○김예지 위원 그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담겨 있지 않은 예산이 왔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그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향은 5개 분야로 정했고 어떤 사업을 지원할 건지는 공모나……

○김예지 위원 예, 그것도 확인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모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안 들어 있고…… 그러니까 공모에 이게 기술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안전평가 할 때 그 재정을 사용할 건지 이런 것도 디테일하지가 않아서 이거 좀 챙겨봐 주시고, 이건 너무 많은 금액이 계획 없이 설정되었다를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재고하셔서라 이거였고.

그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취약지역이라든가 달빛어린이병원 말씀도 하셨고 취약한 부분은 어쨌든 보편복지를 지향하시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런데 보편하려면 어쨌든 취약한 데는 더 쓰셔야 보편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취약한 데는 안 올리시고 잘 되고 있는 데만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보편이 될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가정위탁 대상 아동 중에 학대 피해 2세 이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아 또 장애나 경계선 지능 아동 등 전문성이 있는 가정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전문가적 위탁제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예지 위원 그런데 100만 원인데 5년째 계속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년 사업 보면 360명분만 되어 있거든요, 360명분. 나머지 수요를 보니까 54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나머지 아동은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답변드릴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민 예, 답변 주십시오.

○김예지 위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전문아동보호비는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내년도……

○김예지 위원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반영이 안 됐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내년도에 이 부분도……

○김예지 위원 아까 그 AI 조금 빠지면 23억 정도 충분히 증액하고도 남고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한 150명 정도 더 추가예산 확보하는 것을 계속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취약한 사업들 있잖아요. 취약 지역을 돕는 사업들, 지원 사업들은 조금 더 책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취약 지역……

○**김예지 위원**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의료 지원이라든가 복지 지원이라든가 취약 지역에 하시는 내용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는 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말씀 주신 그 취약 지역의 예산에 대해서는 더 분야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성남 중원 돌봄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취지에 맞게 예산심사에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예산 중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잘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회복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 회복을 위한 예산에도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수진 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AI 관련 상용화 우려에 대한 지적이 좀 있으셨어요. 그 지적에 좀 더 촘촘하게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AI를 의료·복지·돌봄 분야에 접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저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분야 AI 기술 상용화에 대한 지원은 의료 분야 AI 글로벌 경쟁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어서 의료·바이오 산업계의 요구가 매우 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맞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리고 복지·돌봄 분야 AI 접목도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해서 돌봄노동자의 부족이라든지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 소진 또 인적 사각지대가 지금 빠르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봄인력 확대를 해 나가면서, 그것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또 사람이 잘하는 일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잘 활용해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요 복지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말씀 주신 대로 복지·돌봄은 돌봄종사자들이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소진된 상황이어서 그 업무를 좀 더 AI를 활용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게끔 지원하는 목적으로 현

재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리고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 AI를 둘러싼 세계 동향이 급변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도 낙오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수진 위원** 그래서 오히려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예타를 받는 데만 해도 1·2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그 이후에 반영하는 데도 1년 가까이가 소요되고 그렇게 되면 토털 2·3년 이상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저는 예타 면제가 합리적이다, 우리가 지금 멈추거나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현재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라서 사업계획이 그냥 골격처럼 보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상당한 분량의 세부사업 내용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저희가 그동안 조사했던 기획한 자료들은 KDI에 제공해서 적정성 평가를 현재 받고 있고요. 계속 사업 구체화하고 계획해서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인 만큼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내일 예결소위가 이어지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민** 의사진행발언?

○**한지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지금 복지부에서는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없었는데요 있으면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민** 뭐요? 사업?

○**한지아 위원** AX-Sprint 관련해서 500억……

○**위원장 박주민** 그에 대한 KDI의……

○**한지아 위원** KDI에 제출해서 사업 적정성 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다면 같이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달라고……

○**김예지 위원** 저희 의원실에도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전부 다 공유해 주세요.

○**안상훈 위원** 전부 다. 없다 그랬거든.

○**한지아 위원**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형 ARPA-H도 9개월간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았는데도 지금 부실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정성 평가 아예 완료도 안 됐는데 예산 배정이 됐고 지금 3개월 동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급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판단했다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지 사업 목적, 분명히 그 계획서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공유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박주민 이수진 간사님 말씀 듣고 나서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간단하게.

자칫 제가 그 세부 내용을 보고받은 것처럼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저도 적정성 검토 중이라 따로 보고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아까 적정성 검토 완료되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주민 장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검토 중인 자료를 제공하실 수는 없을 것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아직은 KDI하고 협의하면서 자료를 주고받고 있는 단계여서요. 사업계획서가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근거자료들을 KDI랑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명옥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주민 서명옥 위원님.

○서명옥 위원 장관님, KDI로부터 자료를 지금 주고받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서명옥 위원 주고받는다 고 하지만, 확정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주고받을 정도면 저는 그게 다 확정된 자료라고 보거든요. 그 자료라도 좀 주시지요. 그래야 우리가 내일 예산심의에서 검토가 가능하지요.

○위원장 박주민 이것은 법리적인 판단도 필요한데요. 왜 말씀드리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 보면 검토 중인 자료는 여러 가지 혼란이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제공을 안 하는 법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김미애 위원 그러면 예산심사를 못 하지요.

○서명옥 위원 예산심사 못 하지요.

○안상훈 위원 못 하지요. 해야지.

○위원장 박주민 잠깐만요, 한지아 위원님 말씀까지 듣고……

김미애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미애 위원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해 주세요.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김미애 간사님 질의를 먼저 진행하고 의사진행발언 한두 분 더 드린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부산 해운대율의 김미애입니다.

장관님, 이재명표 연금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한데요. 최근 경총이 실시한 국민연금 대국민 인식조사 봤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봤습니다.

○김미애 위원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응답이 55.7%, 특히 20대는 69.2%, 30대는 74.7%가 제도 불신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민연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1위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2위가 세대 간 공정성 확보 방안입니다.

장관님,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과 소통,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미애 위원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 들어야 되는 게 최우선 과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동의합니다.

○김미애 위원 이런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미애 위원 정치권에서 모수개혁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국민들의 불씨는 2030은 70%가 넘습니다. 또 직접적인 국고 투입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안 보니까 안 보여요. 크레딧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정산하는지 안 나타납니다. 사전 지급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어요.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것은 법 개정 사항이 좀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도 법 개정 사항 안 된 것 다 예산안 편성하지않아요. 이것만 왜 그렇게 소극적입니까?

그다음에 연기금에 대한 직접적인 국고 투입을 언제, 얼마만큼, 어느 만큼의 기간 동안 투입하는지 정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지금은……

○김미애 위원 제가 수차례 요구했는데 언제까지 제시 가능할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은 국고 투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 정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 시기와……

○김미애 위원 같은 말씀 계속하시지 말고 다음번에는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연금특위에서라도.

그다음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AI 관련해서 588억에 신규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볼 때 여러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이것 내년 예산은 빗 예산이지요. 국채 발행 얼마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110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긴급하게 필요한 것부터 해야지, 이것 전부 다 미래세대 어깨에 빚더미 얹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예산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예타도 면제해서 588억을 편성해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국가재정법 38조 2항 10호에 긴급한 사회적 상황 대응인지 또 가목에 보면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이어야 하는 것이 또는이 아니라 앤드입니다. 맞지요? 이게 수립이 안 됐어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는데 수립 안 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까 말씀……

○**김미애 위원** 내일 예산심사 전까지 수립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아동수당의 사업 목적이 장관께서는 아동기 본권 보호 차원이다, 양육·보육 지원한다고 하면서 내년에 5233억을 늘렸어요. 각 지자체 분담 비율에 대해 협의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서울시하고는 협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협의된 것을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목적이 분명한데 이것을 다른 이유로 지역 간 차별화할 저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굳이 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목적이 아동 기본권 보호인데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 왜 발행하는지, 지역 간 차등이 왜 필요한지 합리적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로 12억 4800만 원, 국채 발행하면서 안 써도 되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과연 맞습니까? 국민들이 이것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청년 소외계층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올해 2회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35%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게다가 기존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과 내용이 중복되고 성과 관리 체계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굳이 이렇게 2개 나누어서 합니까? 복지부 예산이 상당히 늘었잖아요, 국채 발행하고. 그런데 이것을……

저도 1분 더 주세요.

○**위원장 박주민** 예.

○**김미애 위원** 꼼꼼히 살펴서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고 장관님 돈이라면 어떻게 집행할지처럼 정말 꼼꼼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넘쳐서 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이렇게 하면서 긴급성도 없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네 가지를 지적했는데 하나하나 답변을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 방안 관련해서는 현재 국고 투입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시기나 예산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게 언제쯤 될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마 연말연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고. 또 연금개혁 방안 관련해서 지속가능성이나 세대 공정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특위와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연금특위와 전문가 자문단과 협력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드는 데 정부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AI 예산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는 저희는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사 전까지 검토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것들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이미 기존에도 보조에 대한 것들이 결정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역 간 차등의 합리적 근거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런데 지역 간 차별이라기보다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아동을 돌보는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우대를 하는 거지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김미애 위원** 이것을 또 지역사랑상품권 때문에 12억 4800만 원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직 지금 제가 답변을 덜 드려서요, 위원님. 지역에 대한 것은 차별이라기보다는 우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역상품권 관련해서는 이미 현행법에도 상품권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게 열어져 있고 일부 추가적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하는 지자체가 이것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자체의 자율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걸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

○**김미애 위원** 저는 복지부장관님이라면 사업 목적에 맞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역상품권이라는 부분을 집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온라인에 대한 거는 제가 어떤 부분이 중복인지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아까 한지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듣고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굉장히 부실합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자료요청했더니 한쪽짜리를 보내왔거든요. 그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AI 예산과 다른 분야, AI 복지 돌봄 혁신과도 심지어 중복이 됩니다.

지금 시급하다고 얘기하는데 시급하지 않은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급하다는 거에 대한 논리가 훨씬 더 탄탄해야지 예타 면제받고 500억을 책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ARPA-H에서도 돌봄 복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성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타 면제에 대해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법 위반 소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재부에서 위반 소지가 있으나 해당 법의 취지가 예산편성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처벌규정 또는 제한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의 구멍을 이용해서 예산을 그냥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200억은 보건, 300억은 복지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 이유도 없습니다. 왜 500억 중에서 300억 원이 복지고 200억 원은 보건인지 이런 부분 좀 상세하게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최보운 위원님도?

○최보운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주민 예,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최보운 위원 본 위원이 예산 질의를 했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5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를 보면 법적 검토를 지금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큰 예산에, 그러니까 2년간 78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에서 미리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법의 취지를 보면, 법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중장기 재정 소요, 재원 조달 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연내 적정성 검토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고요. 결국 예산을 먼저 반영하고 검토는 나중에 미뤘고 법적 검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할 부분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부분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건데 전혀 이런 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이런 예산안을 낸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지부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면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 담당 공무원들만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분명하고요. 법적인 검토와 함께 타당한 예산에 대한 검토를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지금 동일한 취지 또는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꼭 들어 봐도 법률 검토를 아예 안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검토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오늘 말씀 주셨던 것들에 관련된 자료를 좀 충실히 준비하셔서, 내일 또 아시다시피 예결소위가 열립니다. 어차피 준비하셔야 되는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준비되는 대로, 오늘 전체회의에서 예결소위원님이 아니신 분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자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법률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인 법률 조항과 법률에 대한 판단

자료를 정리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위원장 박주민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고 예타에 대한 면제 절차를 다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운 위원 질의 하나 더……

○위원장 박주민 아니, 이거를 지금 또 문제 제기하시기보다는……

○최보운 위원 아니, 문제 제기가 아니라 기재부 관련해서……

○위원장 박주민 장관님께서 관련된 자료를 다 정리해 가지고 드리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아 보시고 빈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결소위든 아니면 나중에 전체회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보운 위원 저 자료제출 부분만 말씀……

○위원장 박주민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세요?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

○최보운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부연설명하자면 이 부분은 기재부장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장관의 검토 없이 지금 복지부에서 단독으로 예산을 올린 것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렇지 않습니다.

○최보운 위원 그러면 기재부장관과 검토한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장 박주민 위원님? 최보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것이지요.

○최보운 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장관님한테 질의하시면 안 돼요.

○최보운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은 본 법에 따르면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부분 또 검토한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 같으니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세부적인 것을 정리해서 어떻게 법률 검토가 됐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하고 제4항은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서영석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꼼꼼히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안내말씀드린 대로 소위에서 다루어지려면 서면질의를 오늘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미애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 김윤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박희승 위원님, 백종현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장종태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최보운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과 그리고 저 위원장으

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1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관련된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김미애 김선민 김예지 김 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종현 서명옥 서미화
서영석 안상훈 이개호 이수진 이주영 장종태 전진숙 최보운 한지아

○출장 위원(2인)

백혜련 소병훈

○청가 위원(2인)

김남희 윤호중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1차관 이스란

제2차관 이형훈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장 진영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정책기획관 임호근

복지정책관 배경택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

장애인정책국장 손호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차장 김용재
기획조정관 우영택
바이오생약국장 신준수
의료기기안전국장 이남희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차장 임숙영
기획조정관 이상진
감염병정책국장 홍정익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김도근

【보고사항】

○의안 회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9.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9.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2)

이상 2건 9월 30일 회부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3)

10월 1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10. 1. 서미화 의원·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1)

이상 2건 10월 2일 회부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4)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5. 10. 2.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6)

이상 4건 10월 10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남인순 의원·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1)

이상 5건 10월 14일 회부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10. 1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2)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10.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6)

이상 2건 10월 15일 회부됨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81)

10월 24일 회부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6)

이상 2건 10월 27일 회부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1)

10월 28일 회부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5)

이상 2건 10월 29일 회부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1)

돌봄기본법안

(2025. 10. 2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6)

이상 7건 10월 30일 회부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2)

11월 3일 회부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4)

11월 4일 회부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1)

이상 4건 11월 5일 회부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8)

이상 5건 11월 7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9. 26.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7)

9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0. 2.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2)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0. 2. 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1)

이상 2건 10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1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1)

10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2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3)

10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0. 23.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0)

10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2025. 10. 27.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2)

10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8)

이상 3건 10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0. 30.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2)

10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8)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2025. 10. 31.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3)

이상 2건 11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안 철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0.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1)

10월 21일 발의자 철회 요구

○예비심사기간 통보**2026년도 예산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0)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기간이 11월 6일 09시 30분까지로 확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1)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기간이 11월 6일 09시 30분까지로 확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음

○청원 회부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5. 9. 30. 지은희 외 24인으로부터 남인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29)
10월 1일 회부됨

유족의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

(2025. 10. 12. 박정애 외 52,5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7)
10월 13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7	-	3	-	-	12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	-	-	4
질병관리청	1	-	1	-	1	1

입시회의록